

(붙임)

사금융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

2006. 6.



(서민금융지원팀)비은행감독국

< 요약 >

I. 설문조사 개요

- ◆ '05.10~'06.2월 사금융 이용자 5,133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
- 인터넷설문 81%(4,147명) : 서면설문 19%(986명)
- 남성 65%(3,338명) : 여성 35%(1,795명)
- 사채보유자 60%(3,061명) : 사채미보유자 40%(2,072명)
- 금융채무불이행자 34%(1,762명) : 정상거래자 66%(3,371명)
- 등록업체 이용 45%(2,331명) : 무등록업체 이용 54%(2,777명)

II. 분석결과 및 시사점

1. 자금용도, 이용액·업체 수(추정), 신규이용 시기 등

- 자금용도는 기존 대출금 상환 41%*로 가장 큰 비중, 전년 대비 가계생활 자금 이용 비중 증가('04년 20% → '05년 36%)

* 은행대출금 상환 16%, 카드대금 상환 20%, 사금융 상환 6%

- 1인당 평균 이용액 950만원, 이용업체수 2.1개

○ '04년 대비 이용액 50만원 증가, 이용업체수 0.4개 감소

- 사금융채무 보유자의 42%가 '04년 이후 신규이용자*이고, 62%가 비금융채무불이행자

* '98년 이전 8% → '98~'99년 6% → '00~'01년 13% → '02~'03년 31%

시사점

- ☑ 생계형 사금융 이용자 증가, 소액·복수의 사금융 이용
- ☑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대적 저신용자가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 ⇒ 사금융 신규수요 지속 발생

2. 대부업법 인식정도, 대부업체 선택기준

-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가 37%로 '04년도(45%)에 비해 인식도가 높아졌으나 아직도 문제성 심각
 - 내용별 인식정도는 금리제한 50%, 불법 채권추심 37%, 등록의무화 32%
- 대부업체 선택시 고려대상으로 이자율 43%, 대출가능금액 22%, 신속성 17% 등 주로 대출가능여부를 선택
 - 대부업 등록여부는 6%만이 선택하는 등 피해예방에 소홀

시사점

- 사금융이용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에 취약한 상태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·홍보 강화 필요

※ 범상 금리제한을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 비해 불법 고금리 계약체결 비중이 9%p 높음

3. 사금융 이용금리, 접촉 수단

- 범상 상한 이자율(연66%)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75% [계약 이자율을 모르는 경우(13%) 포함]로 '04년 대비 7%p 감소
 - 추정 평균금리 : 무등록업체 연 230%, 등록업체 연 167%
- 이용자는 생활정보지(36%), 인터넷(30%), 친구 등 지인(14%), 핸드폰 문자메세지(7%), 일간지(6%) 등을 통해 사금융 접촉

시사점

- 대부업법 제정·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 고리사체가 성행
- 대출광고는 사금융이용자 피해방지 정책시행의 중요한 대상

4. 불법 채권추심, 기타 부당사례 경험

- 불법 채권추심을 경험하지 않은 자가 61%로 '04년(29%) 대비 32% 증가
 - 무등록업체 이용자는 등록업체 이용자에 비해 2배 이상 경험
- 계약체결시 타인의 연락처 요구(54%), 선이자 등 수수료 공제(52%) 등의 부당사례 경험
 - 그 밖에 중개수수료 수취(37%), 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의 계약서·어음 작성(32%), 계약서 미교부(31%) 등 경험

시사점

- 꾸준한 단속·홍보 실시로 불법 채권추심행위 현저히 감소, 다만 타인의 연락처 요구, 수수료 수취 등 부당한 피해 지속

5. 연체 일수, 자력상환 가능여부 등

- 연체일수와 관련하여 정상여신(정상납부를 포함한 연체기간 3개월 이내) 77%, 6개월 이상 장기연체 17%
- 자력상환 가능('04년 20%→'05년 48%) 및 파산 등 상환포기('04년 12%→'05년 26%)가 증가한 반면, 채무조정제도 이용 등 신용회복 노력('04년 63%→'05년 24%)은 감소
- 이용 사금융업체 수 ↑ ⇒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 ↑

이용업체 수	1개	2개	3개	4개	5개
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	35%	37%	40%	43%	52%

시사점

- 사금융시장내 양극화 심화 및 사금융 이용에 따른 채무 구조 악화 등으로 잠재적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구조

6. 기타

- 제도금융을 이용하지 않은 사유로 연체기록(25%), 안 될 것 같아서(24%), 보증·담보요구(21%), 긴 대출심사기간(11%)
 -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기록 이라고 답한 경우도 5%
- 가족 몰래 사금융 이용한 자가 86%이며, 현재까지 가족이 알지 못하는 자의 87%가 앞으로도 비밀로 하겠다고 응답
- 사금융이용에 대하여 후회 88%(후회하며 앞으로 이용 않겠다 51%, 후회하나 어쩔수 없다 38%)

시사점

- 제도금융권의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금융 이용하는 자가 상당수(대출이 안 될 것 같아서 24%, 긴 대출심사기간 11%)
- 경제적 어려움을 가족과 함께 해결하는 문화 필요

1. 설문조사 개요

1 설문조사 목적

- 사금융 이용자의 근본 이용원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자금수요자 시각에서 사금융시장의 **현황 및 문제점**을 진단
 - 구조적 문제점 파악 및 장·단기적인 정책방향 제시 등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한 **정책적 시사점 도출**

▶ **대부업법 등 관련제도 개선 및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**

2 설문대상 등

- 설문대상 : 사금융 이용경험이 있거나 이용하려는 자
- 설문기간 : '05.10.21(금)~'06.2.16(목) (약 4개월간)
 - * '02.3월(6,829명), '03.9월(1,615명) 및 '04.9월(3,859명)에 이은 4차 설문조사
- 설문방법 : 인터넷 및 서면을 통한 무기명 설문 실시
 - * 서면설문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등록 대부업체 등을 통해 배포·회수
- 참여인원 : **5,133명*** <인터넷 81%(4,147명), 서면 19%(986명)>
 - * 현재 사금융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채무자는 3,061명(60%)
 - 최근 3년간 인터넷을 통한 설문참여자 비중이 점차 증가 ('03년 31% → '04년 76% → '05년 81%)

3 설문분석 관련 유의점

□ 설문매체(인터넷 및 서면) 및 설문참여자 특성에 따른 구분 없이
전체 응답자를 기준으로 분석

⇒ 인터넷 설문참여자의 증가가 설문결과에 일정한 영향을
미쳤을 것으로 추정

* '03년 설문시 대형대부업체를 통한 설문비중이 컸음

□ 응답자에 따라 이용원인, 처음이용시기 등 일부 설문결과는
현 상황이 아닌 과거 또는 미래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음

* 설문응답자의 37%는 설문조사 시점에 사금융 채무 없음

⇒ '04년도와의 비교는 설문시점간 결과의 단순비교

II. 설문참여자 일반 특성

1 성별·연령별 현황

□ 설문참여자 총 5,133명중 남성이 65%, 여성이 35%로 남성의
참여율이 높음

○ 남성 참여율이 '04년(49%)에 비해 크게 증가

□ 연령별로는 30대가 40%로 가장 많으며 20대 28%, 40대 21%순
으로 20~40대가 대부분

○ '04년도 30대 비율이 가장 높음(46%)

【성별 · 연령별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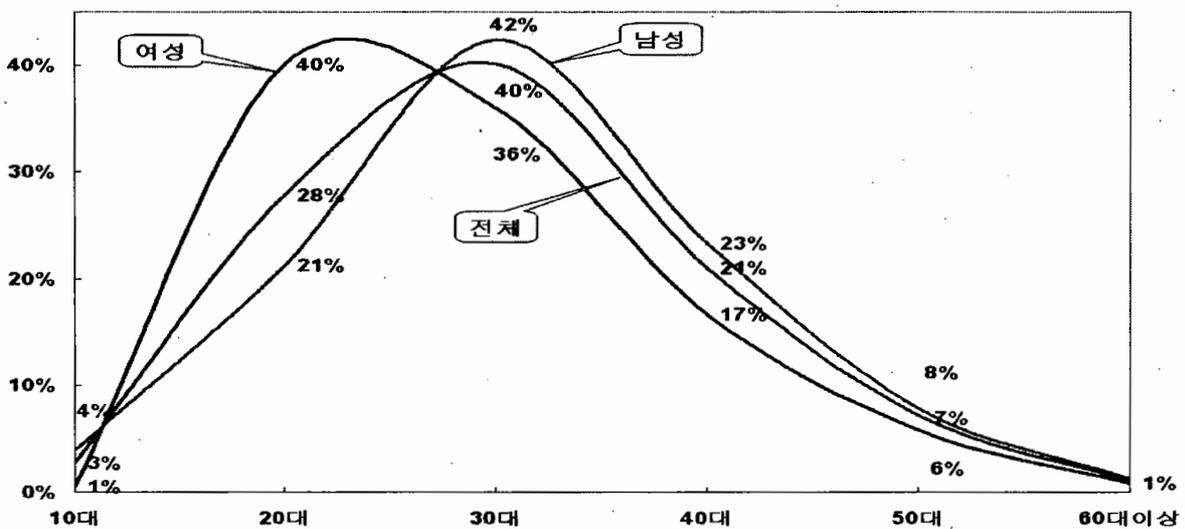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명)

구분	2003년	2004년	2005년		
			계	남성(65%)	여성(35%)
10대	3(0%)	6(0%)	139(3%)	130(4%)	9(1%)
20대	541(33%)	1,112(29%)	1,429(28%)	710(21%)	719(40%)
30대	623(39%)	1,789(46%)	2,060(40%)	1,414(42%)	646(36%)
40대	329(20%)	763(20%)	1,077(21%)	778(23%)	299(17%)
50대	80(5%)	174(5%)	370(7%)	264(8%)	106(6%)
60대 이상	3(0%)	15(0%)	58(1%)	42(1%)	16(1%)
계	1,615(100%)	3,859(100%)	5,133(100%)	3,338(100%)	1,795(100%)

* '03년 무응답 36명(2%)

- 20대 ~ 40대 참여율이 남성(86%), 여성(93%)로 모두 높으나, 남성은 30대(42%)가, 여성은 20대(40%)가 가장 많이 참여
-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20 ~ 30대 젊은 층의 참여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

< 성별 · 연령별 분포도('05) >



2 학력별 현황

- 설문참여자의 학력은 고졸이상이 92%이며, 고졸(45%) 및 대졸(43%)이 비슷하게 참여
 - '04년(95%)의 경우에도 고졸이상의 참여비율이 높았음

【학력별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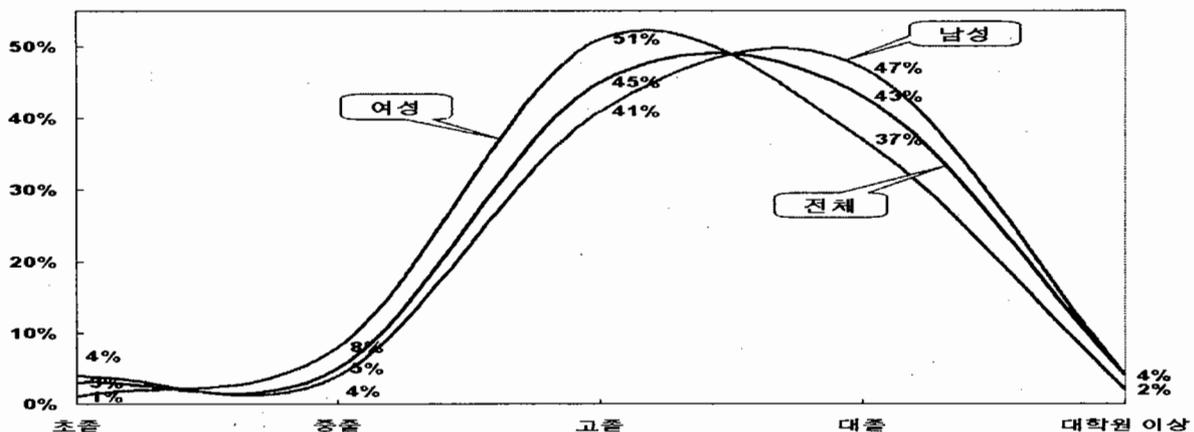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명)

구분	2003년	2004년	2005년		
			계	남성(65%)	여성(35%)
초졸	9(1%)	52(1%)	162(3%)	141(4%)	21(1%)
중졸	82(5%)	166(4%)	281(5%)	131(4%)	150(8%)
고졸	783(46%)	2,121(55%)	2,290(45%)	1,368(41%)	922(51%)
대졸	705(44%)	1,448(38%)	2,219(43%)	1,559(47%)	660(37%)
대학원 이상	32(2%)	72(2%)	181(4%)	139(4%)	42(2%)
계	1,615(100%)	3,859(100%)	5,133(100%)	3,338(100%)	1,795(100%)

* '03년 무응답 50명(3%)

- 성별·학력별로는 남녀 모두 고졸이상의 참여자가 각각 92%, 90%로 대부분을 차지
 - 남성 참여자는 대졸 비중(47%)이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은 고졸 비중(51%)이 가장 높음

< 성별·학력별 분포('05) >



3 직업별 현황

- 설문참여자의 직업은 회사원 및 자영업자가 각각 45% 및 22%로 대부분이며 무직도 8%로 높은 비중
 - 공무원의 비중이 '04년 2%에서 6%로, 대학(원)생이 '04년 1%에서 '05년 3%로 상승

【학력별】

(단위 :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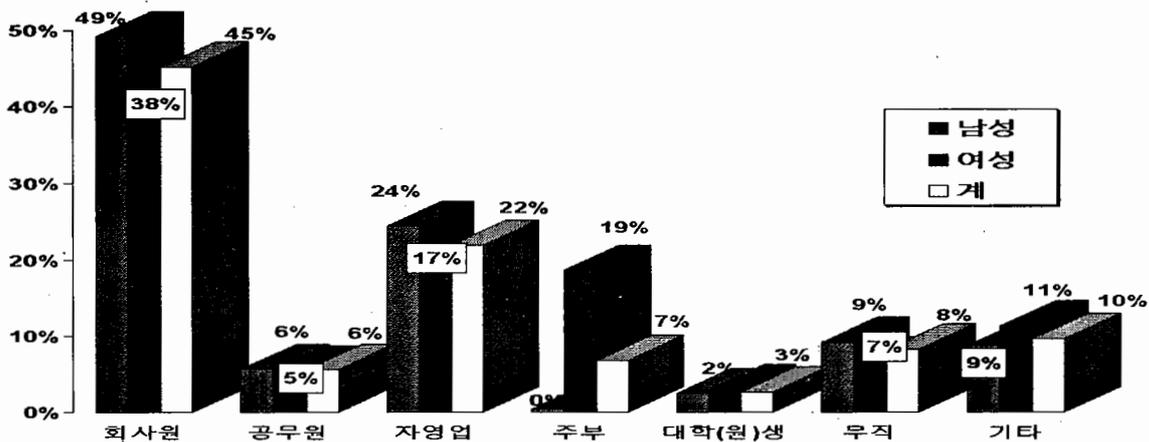
구분	2003년	2004년	2005년		
			계	남성(65%)	여성(35%)
회사원	478(48%)	1,600(41%)	2,317(45%)	1,641(49%)	676(38%)
공무원	50(3%)	80(2%)	287(6%)	189(6%)	98(5%)
자영업	376(24%)	758(20%)	1,125(22%)	813(24%)	312(17%)
주부	147(9%)	493(13%)	348(7%)	13(0%)	335(19%)
대학(원)생	22(1%)	42(1%)	136(3%)	83(2%)	53(3%)
무직	119(8%)	248(6%)	424(8%)	306(9%)	118(7%)
기타	110(7%)	638(7%)	496(10%)	293(9%)	203(11%)
계	1,615(100%)	3,859(100%)	5,133(100%)	3,338(100%)	1,795(100%)

* '03년 무응답 43명(3%)

** 기타 : 프리랜서 또는 강사 등 서비스업, 일용직 등

- 여성참여자의 경우 주부의 비중이 19%로 회사원(38%)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

< 성별 · 직업별 분포('05) >



4 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별 현황

- 설문참여자의 66%가 정상거래자로 '04년(25%)보다 크게 증가
 - 사금융채무 보유자(3,061명)의 62%(1,906명)는 정상채무자
 - ☞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아니나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상대적 저신용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

【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】

(단위 : 명)

구분	2003년	2004년	2005년		
			계	남성(65%)	여성(35%)
금융채무불이행자	507(31%)	2,897(75%)	1,762(34%)	1,159(35%)	603(34%)
정상거래자	1,015(63%)	362(25%)	3,371(66%)	2,179(65%)	1,192(66%)
계	1,615(100%)	3,859(100%)	5,133(100%)	3,338(100%)	1,795(10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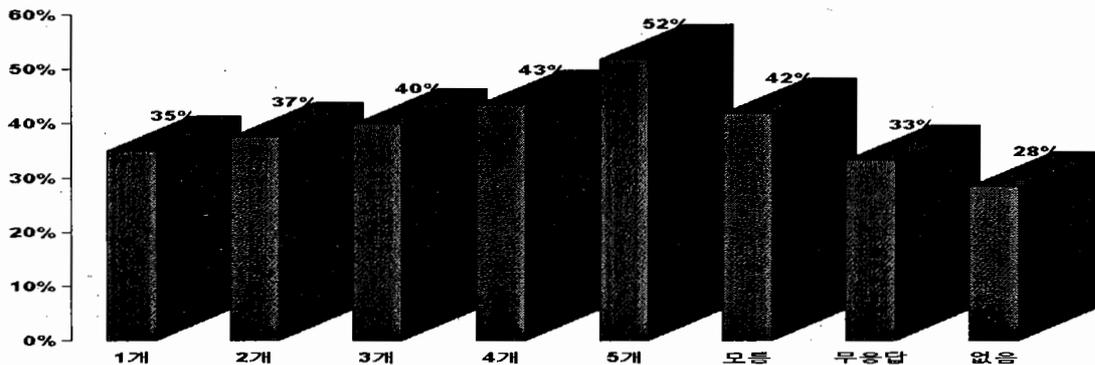
* '03년 무응답 93명(6%)

- 현재 이용중인 사금융업체의 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중이 높음

【사금융이용업체수별 금융채무불이행자 비율】

이용업체수	1개	2개	3개	4개	5개	모름	무응답	없음
비율	35%	37%	40%	43%	52%	42%	33%	28%

< 사금융 이용업체수별 금융채무불이행자('05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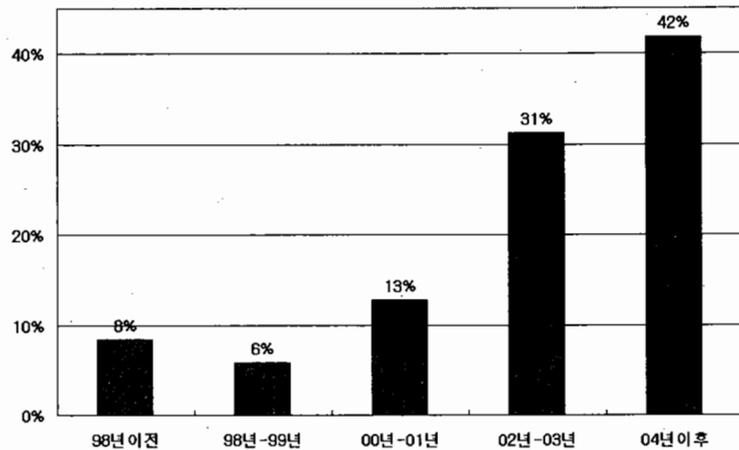
5 최초 사금융 이용시기

- 현재 사금융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3,061명 중 42%는 '04년 이후 처음 사금융을 이용했으며, 31%는 '02~'03년 중 처음 이용
- ↳ 최근 서민금융회사의 소액신용대출 억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신용 대출수요자가 사금융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

【최초 사금융 이용시기】

구분	아는 사람
98년 이전	255명(8%)
98년~99년	175명(6%)
00년~01년	388명(13%)
02년~03년	955명(31%)
04년 이후	1,278명(42%)
무응답	10명(0%)
계	3,061명*

* 현재 사금융채무 보유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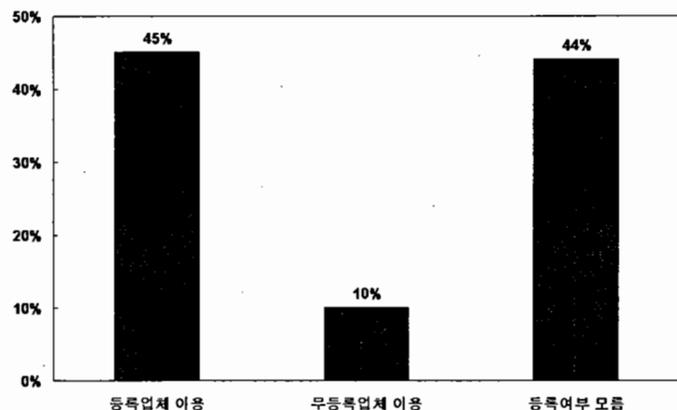


6 등록업체 이용여부

- 응답자의 45%가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, 무등록업체 이용이 10%, 44%는 이용업체의 등록여부를 모름
- '모름' 응답자의 상당수가 무등록업체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

【이용업체의 등록여부】

구분	응답
등록업체 이용	2,331명(45%)
무등록업체 이용	501명(10%)
등록여부 모름	2,276명(44%)
무응답	19명(0%)
계	5,133명



시사점 1 : 사금융시장 동향

- 다양한 계층이 광범위하게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, 신규 사금융 수요가 지속 발생
 - 남녀노소, 학력, 직업 구분 없이 사금융 이용
 - 특히 젊은 층, 고학력, 회사원 층의 이용이 많음
 - 여성의 경우 20대 젊은층의 이용이 많으며, 주부의 사금융 이용도 상당수
- 사금융 이용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간 상관관계 존재
 - 이용중인 사금융업체 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동일 집단 내에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
- 제도권 금융시장에서의 자금수요와 공급간 불일치 심화로 영세서민의 사금융시장 편입현상 발생
 - 금융회사의 여유자금이 저신용자에게 공급되는 것은 아님
 - 외환위기 상황 극복에도 불구하고, 급전이 필요한 상대적 저신용자*는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
 - *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아니지만 신용도가 낮아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자
- 불법사채업 성행으로 영세서민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사금융 환경

Ⅲ. 자금용 이용실태 분석 및 시사점

1 근본 이용원인

□ 자금용 이용의 근본 원인은 어려워진 경제여건(교육비등 급전필요 26%, 사업실패 19%, 실직 17% 등 62%)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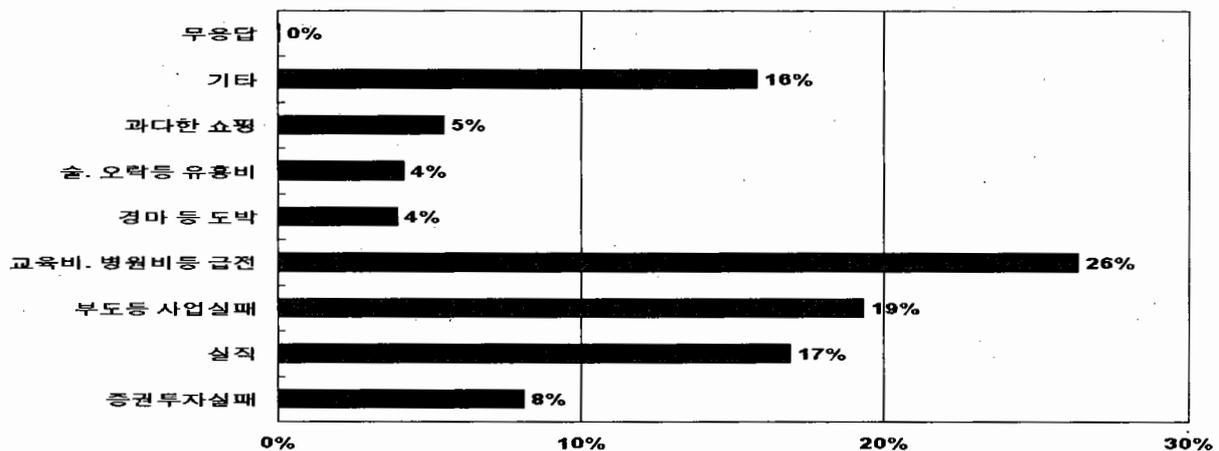
* 기타 응답도 집안일, 생활자금, 주택비 등 생활비 성격이 많음

【근본 이용원인】

(단위 : 명)

구분	2003년	2004년	2005년		
			계	남성(65%)	여성(35%)
증권투자실패	140(9%)	147(4%)	415(8%)	319(10%)	96(5%)
실직	290(18%)	629(16%)	866(17%)	551(17%)	315(18%)
부도등 사업실패	322(20%)	1,077(28%)	993(19%)	737(22%)	256(14%)
교육비·병원비등 급전	333(21%)	834(22%)	1,354(26%)	814(24%)	540(30%)
경마 등 도박	37(2%)	29(1%)	202(4%)	140(4%)	62(3%)
술·오락등 유흥비	76(5%)	115(3%)	213(4%)	157(5%)	56(3%)
과다한 쇼핑	197(12%)	217(6%)	279(5%)	123(4%)	156(9%)
기타	153(9%)	563(15%)	809(16%)	495(15%)	314(17%)
무응답	67(4%)	248(6%)	2(0%)	2(0%)	0(0%)
계	1,615(100%)	3,859(100%)	5,133(100%)	3,338(100%)	1,795(100%)

< 근본 이용원인('05) >



-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교육비등 급전 비중이 6%p 높은 반면 사업실패 비중이 8%p 낮음

➔ 경제활동 참가비중에 따른 사회구조적 특성 반영

【경제활동 참가율】 남성 74%, 여성 49%(통계청, '06.3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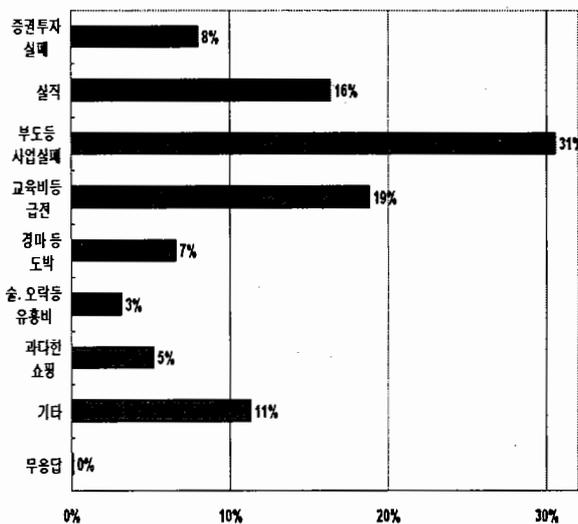
-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사업실패(31%)를, 정상채무자는 교육비등 급전(30%)을 1순위 근본원인으로 응답

【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별 근본 이용원인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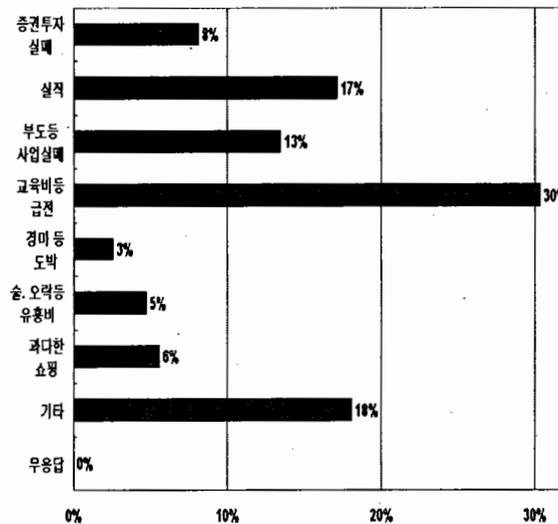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명)

구 분	금융채무불이행자	정상채무자	계
증권투자실패	141(8%)	274(8%)	415(8%)
실직	288(16%)	578(17%)	866(17%)
부도등 사업실패	538(31%)	455(13%)	993(19%)
교육비·병원비 등 급전	332(19%)	1,022(30%)	1,354(26%)
경마 등 도박	116(7%)	86(3%)	202(4%)
술·오락등 유흥비	55(3%)	158(5%)	213(4%)
과다한 쇼핑	91(5%)	188(6%)	279(5%)
기타	199(11%)	610(18%)	809(16%)
무응답	2(0%)	0(0%)	2(0%)
계	1,762(100%)	3,371(100%)	5,133(100%)

< 금융채무불이행자 >



< 정상채무자 >



2 자금용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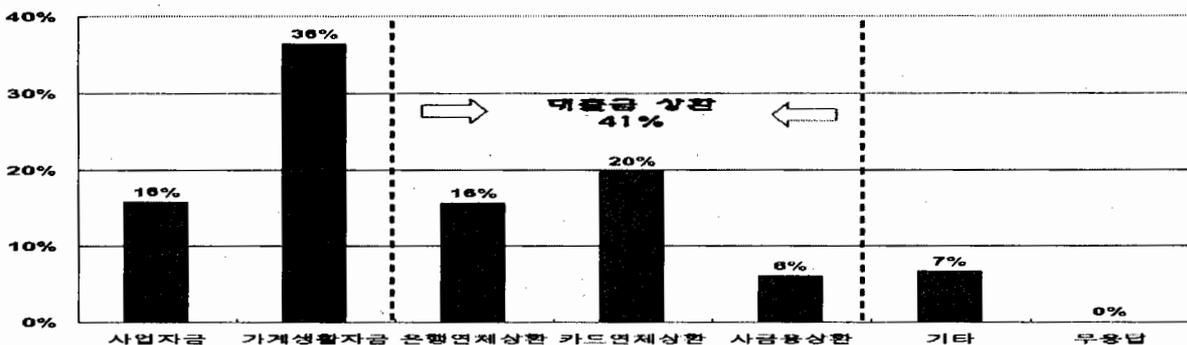
- **사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사람이 41%**
 - 대출금 상환비중(41%)이 '04년(61%)에 비해 크게 감소(20%p) 했는데, 신용카드 연체대금 상환비중 감소*에 기인
 - * '04년 40% → '05년 20%
 - **가계생활자금 사용(36%)이 '04년(20%)에 비해 크게 증가**
- **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카드연체대금 상환용도가 7%p 높은 반면, 사업자금 용도는 9%p 낮음**

【자금용도】

(단위 : 명)

구 분	2003년	2004년	2005년		
			계	남성(65%)	여성(35%)
사업자금	175(11%)	539(14%)	808(16%)	624(19%)	184(10%)
가계생활자금	451(28%)	762(20%)	1,868(36%)	1,197(36%)	671(37%)
대출금 상환	922(57%)	2,369(61%)	2,118(41%)	1,320(40%)	798(44%)
은행연체 상환	277(17%)	628(16%)	800(16%)	534(16%)	266(15%)
카드연체 상환	573(35%)	1,529(40%)	1,012(20%)	577(17%)	435(24%)
사금융 상환	72(4%)	212(5%)	306(6%)	209(6%)	97(5%)
기타	44(3%)	141(4%)	338(7%)	196(6%)	142(8%)
무응답	23(1%)	48(1%)	1(0%)	1(0%)	0(0%)
계	1,615(100%)	3,859(100%)	5,133(100%)	3,338(100%)	1,795(10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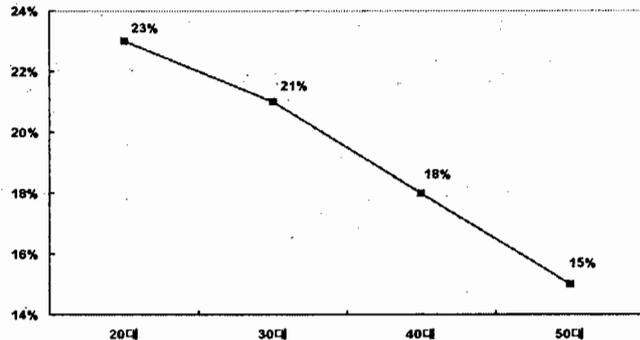
< 자금용도('05) >



- 카드연체상환 용도의 연령대별 비중은 20대(23%)가 가장 높으며,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

【연령대별 카드연체상환 비중】

연령대	카드연체상환
20대	23%
30대	21%
40대	18%
50대	15%



시사점 2 : 근본 이용원인 및 자금용도

- 가계생활자금 이용 비중 증가('04년 20%→'05년 36%)로 보아 생계형 사금융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, 아직도 기존 채무상환 용도로 사금융을 가장 많이 이용(41%)
 -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사금융을 통해 기존 채무를 상환 (돌려막기)함에 따라 채무해소의 어려움 심화
 - 카드연체 상환을 위한 젊은 층의 사금융 이용 비중이 높음

【필요사항】

- ➔ 경기활성화 및 실직자 등을 위한 취업기회·복지제도 확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 필요
- ➔ 사금융을 포함,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통하여 채무자의 자활을 지원하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
 - 분할상환, 기한유예 등 채무자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채무해소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감액 등의 조정
- 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용교육 필요

3 대부업법 인식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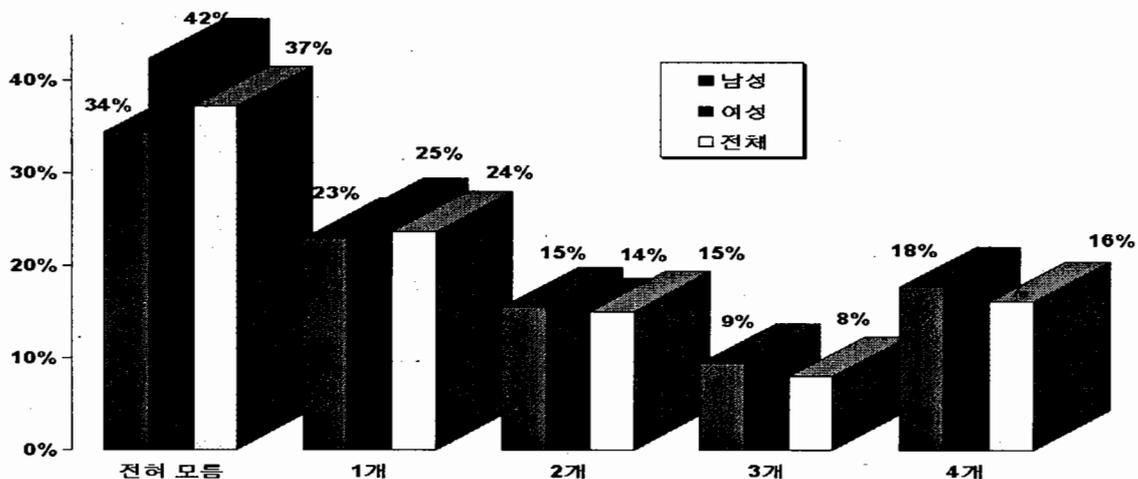
- 금리제한(연 66%), 불법적 채권추심 금지 등 대부업법상 주요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37%
- '04년도(45%)에 비해 인식도가 높아졌으나 아직도 문제성 심각
- 남녀별로는 전혀모름 응답이 여성 42%, 남성 34%로 여성의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음

【대부업법 인식도】

(단위 : 명)

구 분	2003년	2004년	2005년		
			계	남성(65%)	여성(35%)
전혀모름	373(23%)	1739(45%)	1,909(37%)	1,149(34%)	760(42%)
1개 이상	1,215(75%)	2,007(52%)	3,224(63%)	2,189(66%)	671(58%)
1개	291(18%)	516(13%)	1,215(24%)	765(23%)	450(25%)
2개	378(23%)	673(17%)	773(15%)	516(15%)	257(14%)
3개	258(16%)	355(9%)	409(8%)	315(9%)	94(5%)
4개	288(18%)	463(12%)	827(16%)	593(18%)	234(13%)
무응답	27(2%)	113(3%)	0(0%)	0(0%)	0(0%)
계	1,615(100%)	3,859(100%)	5,133(100%)	3,338(100%)	1,795(100%)

< 대부업법 인식도('05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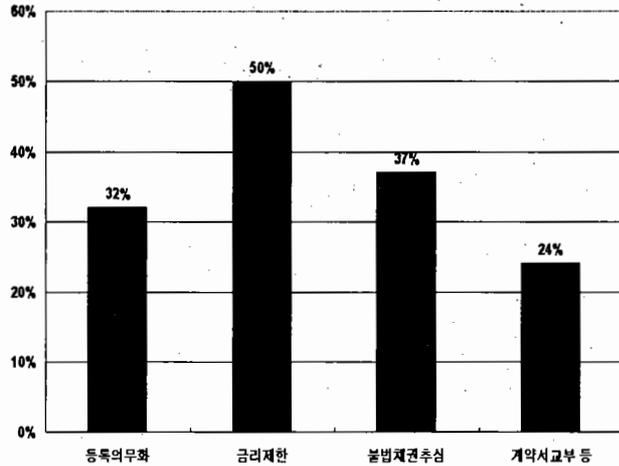


- 전체응답의 각 항목별 인식정도는 금리제한 50%, 불법채권추심 37%, 등록의무화 32%로 전반적으로 낮음

⇒ 사금융이용자의 관심 정도에 따라 법 항목별 인식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

【항목별 인식정도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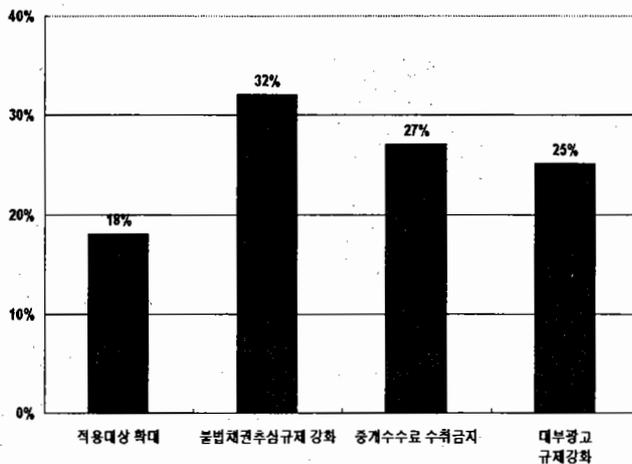
구분	아는 사람
등록의무화	1,644명(32%)
금리제한	2,560명(50%)
불법채권추심	1,910명(37%)
대부계약서 교부 등	1,219명(24%)
비율산출기준	5,133명



- 불법적 채권추심 금지 강화 등 개정 대부업법('05.9월)의 주요내용에 대한 인식정도는 전반적으로 낮음

【개정 항목별 인식정도】

구분	아는 사람
적용대상 확대	901명(18%)
불법채권추심 규제 강화	1,661명(32%)
중개수수료 수취금지	1,400명(27%)
대부광고 규제강화	1,267명(25%)
비율산출기준	5,133명



4 대부업자 선택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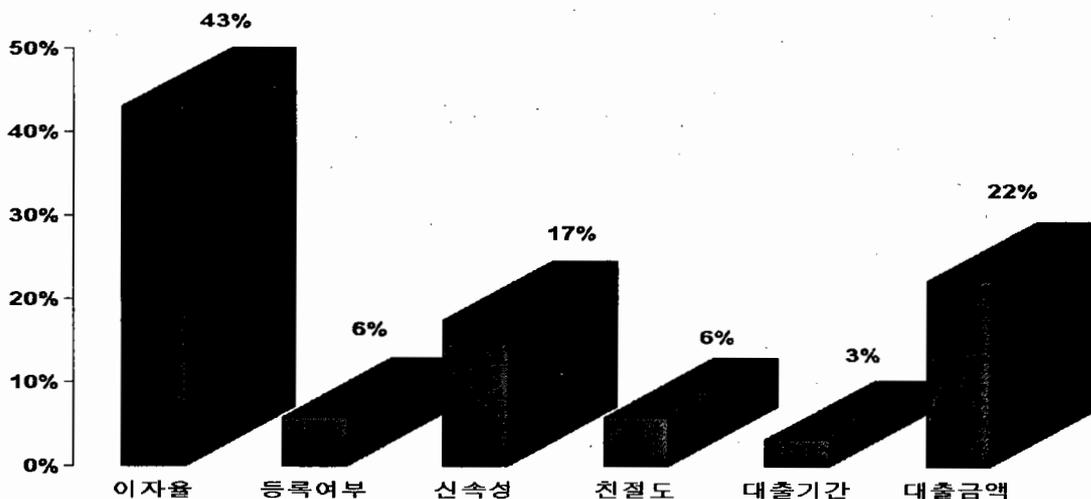
- 대부업자 선택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이자율 (43%), 대출가능금액(22%), 대출의 신속성(17%) 순임
- 대부업 등록여부는 6%로 사금융이용자가 대부업자 선택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

【대부업자 선택기준】

(단위 : 명)

구분	2003년	2004년	2005년
이자율	720(45%)	1,369(35%)	2,209(43%)
대부업 등록여부	113(7%)	151(4%)	301(6%)
대출의 신속성	319(20%)	839(22%)	896(17%)
친절도	27(2%)	32(1%)	301(6%)
대출기간	37(2%)	105(3%)	162(3%)
대출가능금액	330(20%)	1,239(32%)	1,140(22%)
기타	18(1%)	71(2%)	110(2%)
무응답	51(3%)	53(1%)	14(0%)
	1,615명(100%)	3,859명(100%)	5,133명(100%)

< 대부업자 선택기준('05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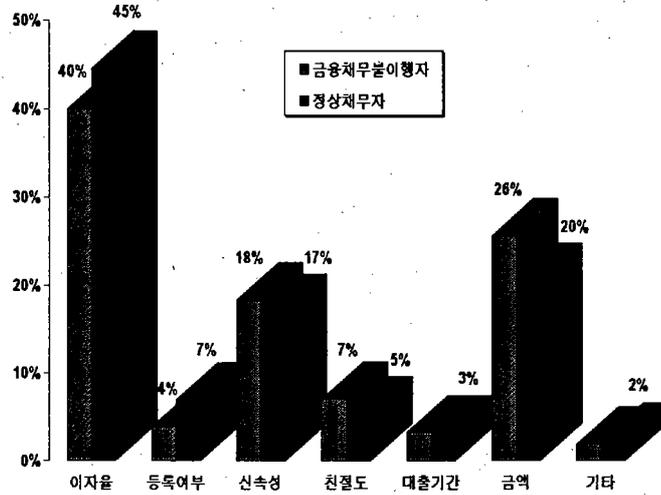


□ 정상채무자에 비해 금융채무불이행자는 대출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%p 높고 이자율 비중이 5%p 낮음

○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상대적으로 상환가능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당장 대출가능한 금액에 주된 관심을 기울임

【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별】

구분	금융채무불이행자	정상채무자
이자율	40%	45%
대부업 등록여부	4%	7%
대출의 신속성	18%	17%
친절도	7%	5%
대출기간	3%	3%
대출금액	26%	20%
기타	2%	2%
무응답	0%	0%



시사점 3 : 법 인식도 및 사금융 선택기준

□ 사금융이용자의 상당수(1/3 이상)가 관련법령인 대부업법에 대하여 잘 모름

○ 사금융 선택시 대출가능여부(이자율 및 대출금액)가 주된 관심사이므로 불법 사금융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곤란

○ 특히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대부업법의 주요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기보호 능력이 떨어짐

【필요사항】

➔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부업법의 내용 및 사금융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

5 평균 이용 금리수준

□ 현재 사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의 75%*가 대부업법상 상한 이자율(월 5.5%)을 초과하는 사금융을 이용

* 이자율을 모르는 경우를 포함 : 보통 법정금리 초과 고금리 피해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사금융의 이자율을 모르는 경우가 많음

** 다만, 법 시행전 체결된 계약까지 포함하고 있어 현행 대출금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

○ 법정 금리이내 이용은 '04년 설문 대비 10%p 증가

○ 설문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이자율은 월 17%(연204%)로 '04년도(월 19%, 연228%)에 비하여 다소 하락

【월평균 이용금리】

(단위 : 명)

구분	2003년	2004년	2005년
5.5% 이하	724(45%)	567(15%)	754(25%)
5.5% 초과	787(49%)	3,158(82%)	1,900(62%)
5.5%~10%	489(30%)	1,161(30%)	790(26%)
10%~20%	122(8%)	713(18%)	324(11%)
20%~30%	73(5%)	576(15%)	296(10%)
30%초과	103(6%)	708(18%)	490(16%)
모름	-	-	403(13%)
무응답	104(6%)	134(3%)	4(0%)
계	1,615(100%)	3,859(100%)	3,061*(100%)
추정 금리	월 11%(연132%)	월 19%(연228%)	월 17%(연204%)

* 전체응답자(5,133명) 중 사금융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자

** 평균금리 산출근거 : $(\sum \text{각 구간의 중간값} \times \text{각 구간별 응답자수}) / (\text{전체 응답자수})$ 로 구하되, 월5.5%이하는 경계값인 5.5%를 사용하고 월 30%이상은 30%-60%의 중간값인 45%를 사용

□ 대부업 등록여부별로는 무등록업체 이용자의 86%, 등록업체 이용자의 60%가 법정금리를 초과*하는 사금융을 이용

* 이자율을 모르는 경우를 포함

○ 설문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이자율은 등록업체 월 14% (연167%), 무등록업체 월 19%(연 230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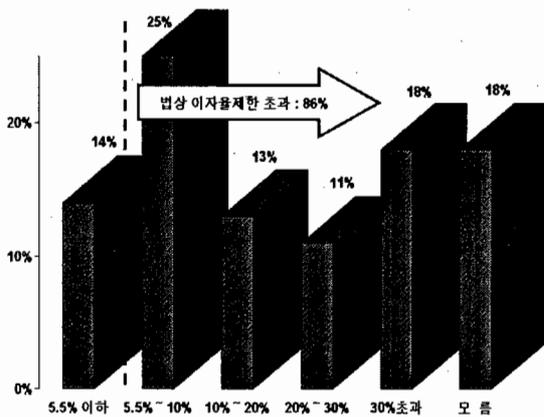
【 이용업체의 등록여부별 월평균 이용금리】

(단위 : 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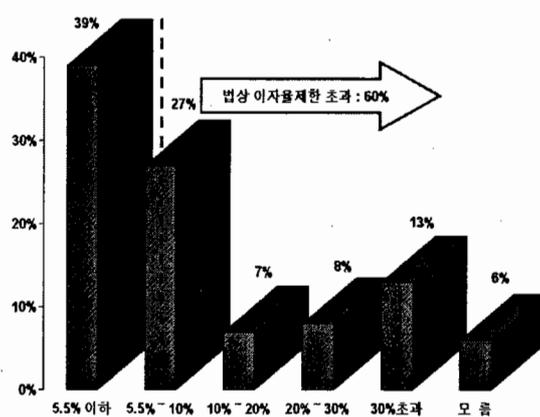
구분	등록업체 이용	무등록업체 이용		
		무등록	모름(무등록 추정)	
5.5% 이하	519(39%)	235(14%)	47(15%)	188(13%)
5.5% 초과	722(54%)	1,178(68%)	230(73%)	948(67%)
5.5%~10%	354(27%)	436(25%)	72(23%)	364(26%)
10%~20%	92(7%)	232(13%)	40(13%)	192(14%)
20%~30%	103(8%)	193(11%)	45(14%)	148(10%)
30%초과	173(13%)	317(18%)	73(23%)	244(17%)
모름	85(6%)	318(18%)	37(12%)	281(20%)
무응답	-	4(0%)	-	4(0%)
계	1,326(100%)	1,735(100%)	314(100%)	1,421(100%)
추정 금리	월14%(연167%)	월19%(연230%)	21%(연252%)	월19%(연225%)

* 평균금리 산출근거 : (Σ 각 구간의 중간값x각 구간별 응답자수)/(전체 응답자수)로 구하되, 월5.5%이하는 경계값인 5.5%를 사용하고 월 30%이상은 30%-60%의 중간값인 45%를 사용

< 무등록업체 이용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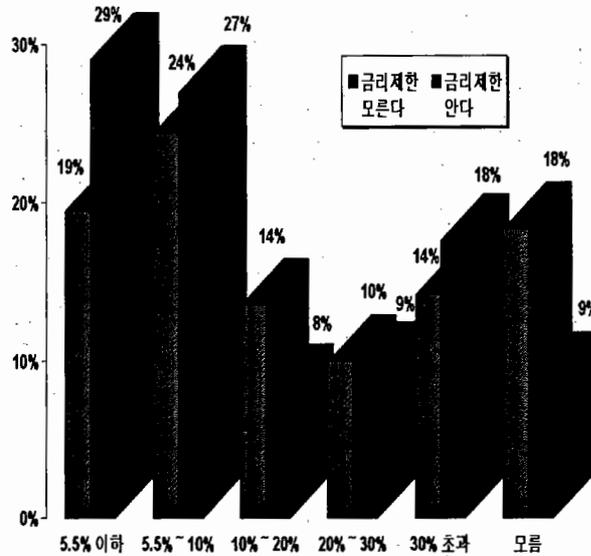
< 등록업체 이용 >



□ 법상 금리제한을 아는 사람과 비교할 때, 모르는 사람이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사금융 이용비중이 9%p 높음

【금리제한 인지여부별('05)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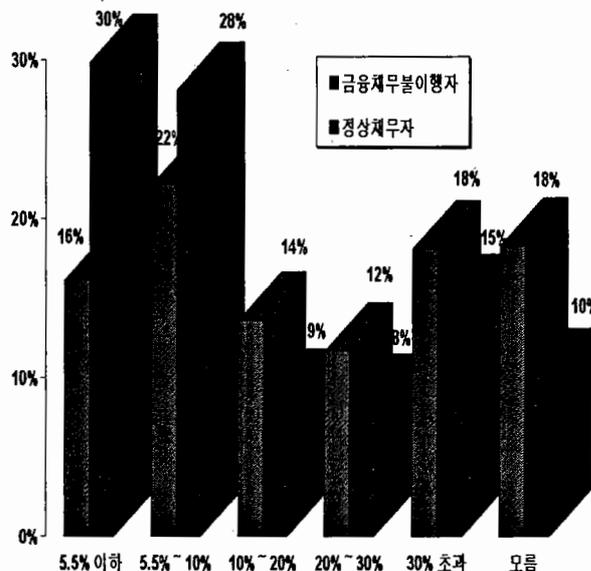
구분	금리제한 모른다	금리제한 안다
월 5.5% 이하	19%	29%
월 5.5% 초과	80%	71%
월 5.5%~10%	24%	27%
월 10%~20%	14%	8%
월 20%~30%	10%	9%
월 30% 초과	14%	18%
모름	18%	9%



□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정상채무자와 비교할 때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사금융을 이용하는 비중이 14%p 높음

【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별('05)】

구분	금융채무 불이행자	정상 채무자
월 5.5% 이하	16%	30%
월 5.5% 초과	84%	70%
월 5.5%~10%	22%	28%
월 10%~20%	14%	9%
월 20%~30%	12%	8%
월 30% 초과	18%	15%
모름	18%	10%



6 1인당 사금융 이용액

□ 1인당 사금융 이용액은 5백만원 이하 56%, 5백만원~1천만원 24%로,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이 대부분(80%)

○ 설문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1인당 이용액은 약 950만원으로 '04년도(900만원)와 비슷함

【1인당 이용액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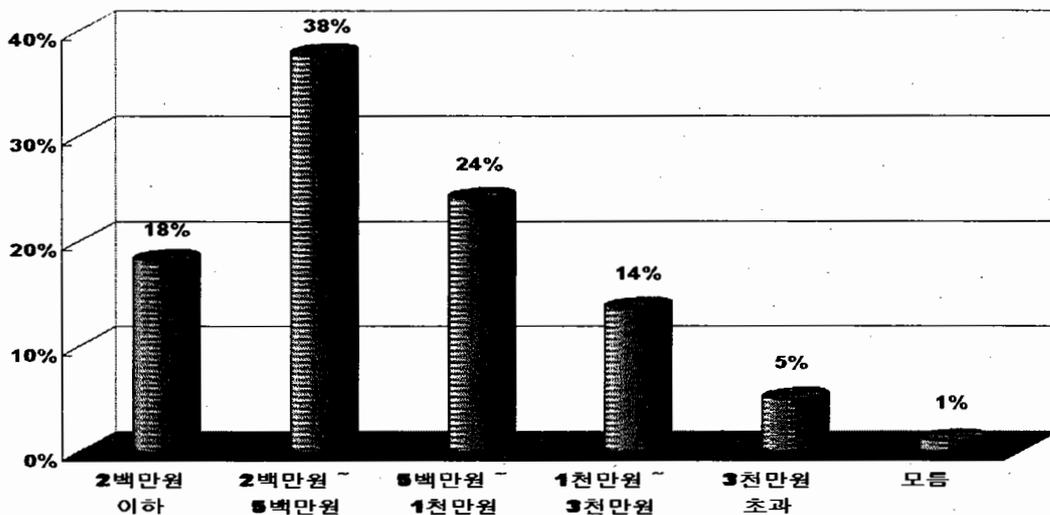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명)

구분	2003년	2004년	2005년
2백만원 이하	266(16%)	550(15%)	556(18%)
2백만원~5백만원	629(39%)	1,294(35%)	1,154(38%)
5백만원~1천만원	388(24%)	1,048(28%)	735(24%)
1천만원~3천만원	155(10%)	497(13%)	417(14%)
3천만원 초과	51(3%)	136(4%)	153(5%)
모름	-	-	32(1%)
무응답	126(8%)	205(5%)	14(0%)
계	504(100%)	3,730(100%)	3,061*(100%)
1인당 추정 이용액	790만원	900만원	950만원

* 전체응답자(5,133명) 중 사금융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자

** 이용액 추정근거 : $(\sum \text{각 구간의 중간값} \times \text{각 구간별 응답자 수}) / (\text{전체 응답수})$ 로 구하되, 3천만원초과는 7천5백만원을 중간값으로 사용

< 1인당 사금융 이용액('05년) >



□ 1인당 총 부채액(사금융 포함)은 3천만원 이하가 69%로 '04년(64%) 대비 5%p 증가

○ 설문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1인당 부채액은 약 3천4백만원으로 '04년도(약 3천6백) 대비 다소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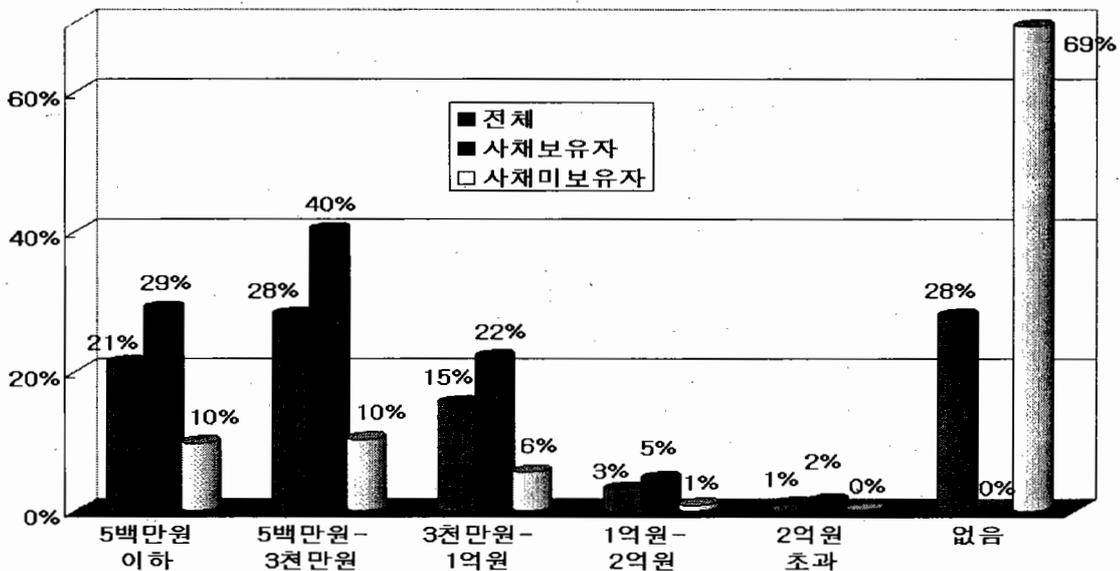
【사금융채무 보유자의 1인당 총부채액】

(단위 : 명)

구분	2003년	2004년	2005년		
			계	사채보유자	미보유자
없음	84(5%)	75(2%)	1,439(28%)	-	1,439(69%)
5백만원 이하	358(22%)	584(16%)	1,090(21%)	889(29%)	201(10%)
5백만원~3천만원	709(44%)	1,799(48%)	1,447(28%)	1,233(40%)	214(10%)
3천만원~1억원	310(19%)	1,052(28%)	794(15%)	678(22%)	116(6%)
1억원~2억원	88(5%)	126(3%)	161(3%)	142(5%)	19(1%)
2억원 초과	12(1%)	30(1%)	52(1%)	47(2%)	5(0%)
모름	-	-	101(2%)	60(2%)	41(2%)
무응답	54(3%)	64(2%)	49(1%)	12(0%)	37(2%)
계	1,615(100%)	3,730(100%)	5,133(100%)	3,061(100%)	2,072(100%)
1인당 추정 이용액	3천4백만원	3천6백만원	3천4백만원	3천5백만원	2천9백만원

** 총부채액 추정근거 : (∑ 각 구간의 중간값x각 구간별 응답자 수)/(전체 응답수)로 구하되, 2억원초과는 3억5천만원을 중간값으로 사용

< 1인당 총부채액 비중('05) >



7 대출받은 사금융 업체 수

- 사금융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51%가 2개 이상의 사금융업체를 이용
- 설문결과를 토대로 추정된 1인당 이용업체수는 2.1개로 '04년 (2.5개) 대비 0.4개 감소

【사금융 업체 수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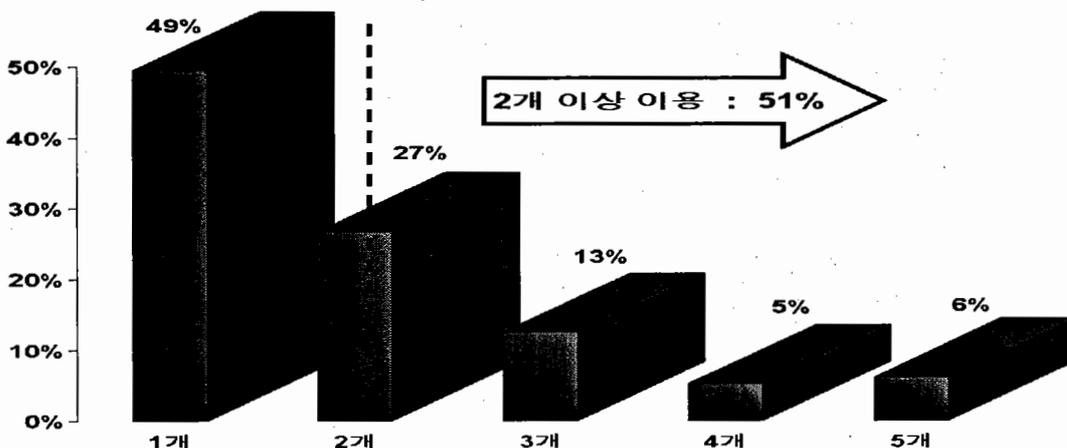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명)

구분	2003년	2004년	2005년	
			전체	사금융 채무자만
없음	199(12%)	414(11%)	1,913(37%)	-
1개	538(33%)	1,185(32%)	1,513(29%)	1,513(49%)
2개	444(27%)	892(24%)	819(16%)	819(27%)
3개	216(13%)	548(15%)	383(7%)	383(13%)
4개	75(5%)	295(8%)	159(3%)	159(5%)
5개 이상	54(3%)	284(8%)	187(4%)	187(6%)
모름	-	-	117(2%)	-
무응답	89(6%)	85(2%)	42(1%)	-
계	1,615(100%)	3,703(100%)	5,133(100%)	3,061(100%)
1인당 추정 이용업체수	2.1개	2.5개	2.1개	2.1개

* 추정이용업체수 산정시에는 현재 사금융채무가 있는 자만 고려

** 1인당 이용업체수 추정근거 : $(\sum \text{각 구간의 중간값} \times \text{각 구간별 응답자 수}) / (\text{전체 응답수})$ 로 구하되, 5개이상은 중간값은 7.5개를 사용

< 사금융채무자의 대출받은 사금융 업체수('05년) >



8 연체 일수

□ 정상여신(정상납부를 포함한 연체기간 3개월 이내*)이 77%인 반면, 6개월 이상 장기연체도 17%(‘모름’ 포함)로 나타남

* 비은행 업종 자산건전성 분류(연체기간 기준)에 따름

○ 정상여신 비중은 '04년(63%) 대비 14%p 증가하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는 '04년(25%) 대비 7%p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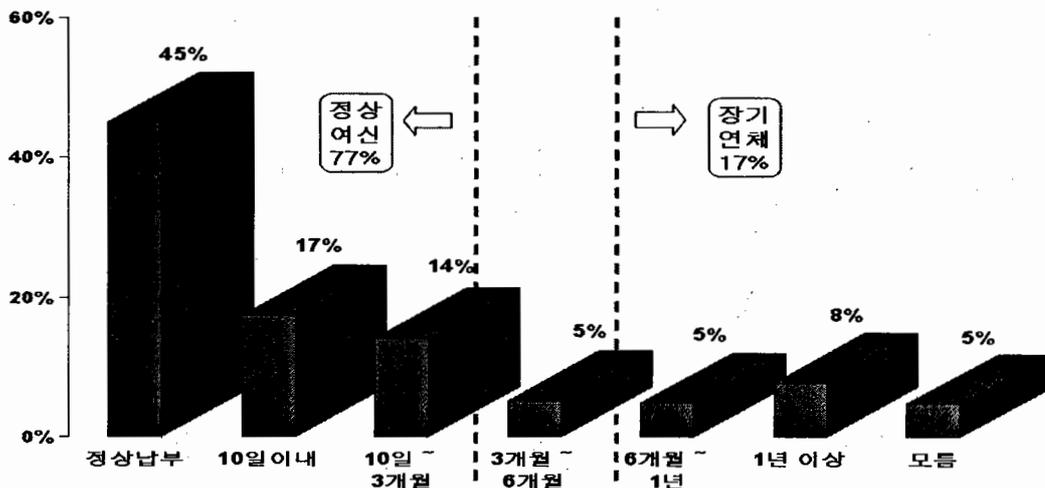
【평균 연체 일수】

(단위 : 명)

구분	2003년	2004년	2005년
정상납부	570(35%)	974(25%)	1,377(45%)
10일 이내	559(35%)	742(19%)	533(17%)
10일~3개월	276(17%)	717(19%)	434(14%)
3개월~6개월	56(3%)	318(8%)	158(5%)
6개월~1년	56(3%)	267(7%)	149(5%)
1년 이상		678(18%)	236(8%)
모름	-	-	145(5%)
무응답	98(6%)	163(4%)	29(1%)
계	1,615(100%)	3,859(100%)	3,061*(100%)

* 현재 자금용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자

< 연체일수('05) >



9 부채상환 가능성

- 향후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력으로 상환가능하다는 응답이 48%로 '04년(20%) 대비 28%p 증가
 -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력상환가능 응답이 9% 높음
- '04년도 대비 채무조정제도 이용은 감소(63%→24%)한 반면, 개인파산 등 상환불능은 증가(12%→26%)

➔ 사금융 부문도 양극화 현상 발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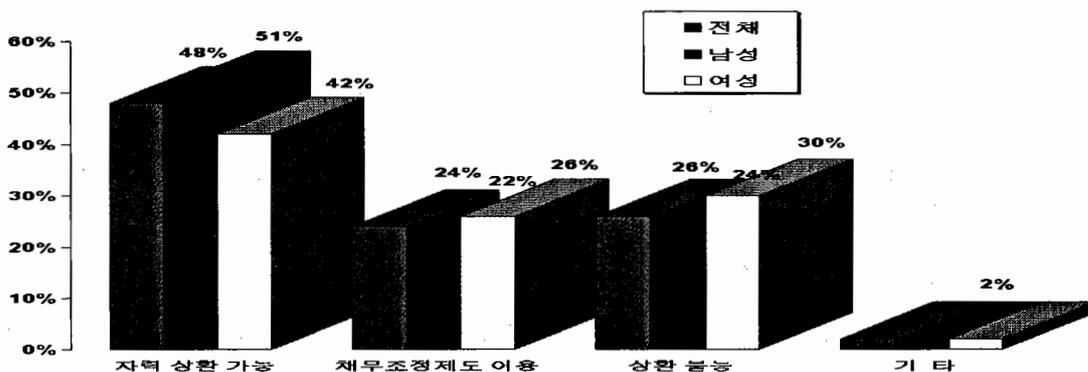
【부채상환 가능성】

(단위 : 명)

구 분	2003년	2004년	2005년		
			계	남성(66%)	여성(34%)
자력 상환 가능	822(51%)	785(20%)	1,461(48%)	1,024(51%)	437(42%)
채무조정제도 이용	368(23%)	2,450(63%)	733(24%)	460(22%)	273(26%)
신용회복제도	-	-	513(17%)	311(15%)	202(19%)
개인희생제도	-	-	220(7%)	149(7%)	71(7%)
상환 불능	282(17%)	444(12%)	801(26%)	490(24%)	311(30%)
개인파산·면책	-	-	166(5%)	97(5%)	69(7%)
모르겠다	-	-	635(21%)	393(20%)	242(23%)
기 타	65(4%)	124(3%)	62(2%)	33(2%)	29(3%)
무응답	98(5%)	56(1%)	4(0%)	2(0%)	2(0%)
계	1,615(100%)	3,859(100%)	3,061*(100%)	2,009(100%)	1,052(100%)

* 현재 사금융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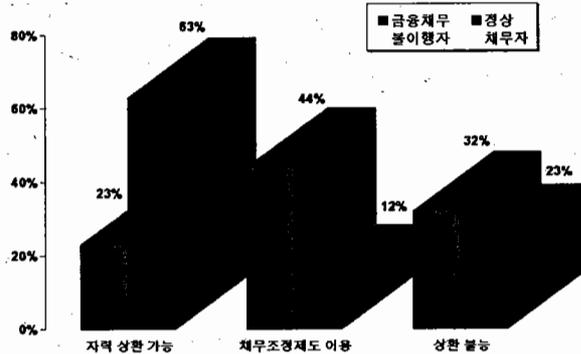
< 부채상환 가능성('05) >



- 자력상환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금융채무불이행자 23%, 정상채무자 63%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남

【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별(‘05)】

구분	금융채무불이행자	정상채무자
자력상환가능	23%	63%
채무조정제도이용	44%	12%
상환불능	32%	23%



시사점 4 : 이용금리·금액 및 상환가능성 등

- 대부업법상 금리제한에 불구하고 사금융이용자의 상당수가 아직도 법상 제한을 넘는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음
 - 일단 사금융 이용시 사금융업체와의 거래관계가 심화
 - 성급한 금리제한 강화시 사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 의문

【필요사항】

- ➔ 서민금융회사 활성화를 통해 영세서민·자영업자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고, 제한금리 인하문제는 신중하게 접근

- 사금융이용자도 정상납부·자력상환 가능한 자와 장기연체·자력상환 불가능자 간의 차이가 커짐

- 사금융이용자 계층별 양극화 심화

【필요사항】

- ➔ 저리의 정책자금·신용회복제도 등을 통해 사금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

10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

□ 불법채권추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61%로 '04년(29%) 대비 32%p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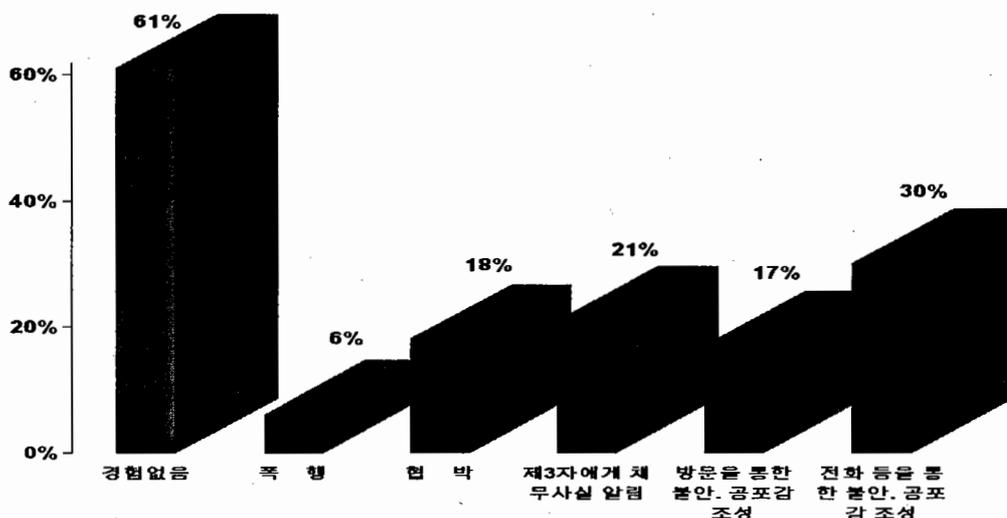
- 전화 등을 통한 불안·공포감 경험자가 30%,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경험자가 21%로 나타남
- 폭행을 제외하고 각종 불법채권추심을 경험한 비율은 '04년에 비하여 상당부분 감소

【불법채권추심 경험】

(단위 : 명)

구분	2003년	2004년	2005년
경험없음	871(54%)	1,119(29%)	3,113(61%)
폭행	49(3%)	116(3%)	283(6%)
협박	238(15%)	1,462(39%)	911(18%)
제3자에게 채무사실 알림	312(19%)	1,505(39%)	1,099(21%)
방문을 통한 불안·공포감 조성	157(10%)	1,066(28%)	858(17%)
전화 등을 통한 불안·공포감 조성	445(28%)	2,182(57%)	1,534(30%)
비율산출기준	1,615명	3,859명	5,133명

< 불법채권추심 경험('05년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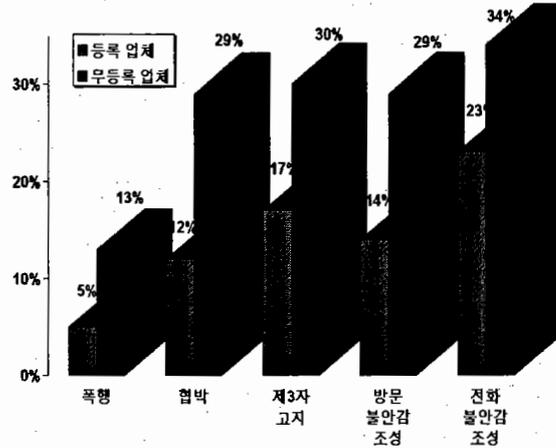


□ 무등록업체를 이용한 사람은 등록업체 이용자보다 불법추심 피해가 2배이상 많음

○ 등록업체 이용자도 전화등을 통한 불안·공포감 조성 및 제3자에게 채무사실이 알려진 경험비중이 상당

【등록 여부별 불법추심 경험】

구 분	등록업체	무등록업체
폭행	5%	13%
협박	12%	29%
제3자에게 채무사실 알림	17%	30%
방문을 통한 불안·공포감 조성	14%	29%
전화등을 통한 불안·공포감 조성	23%	34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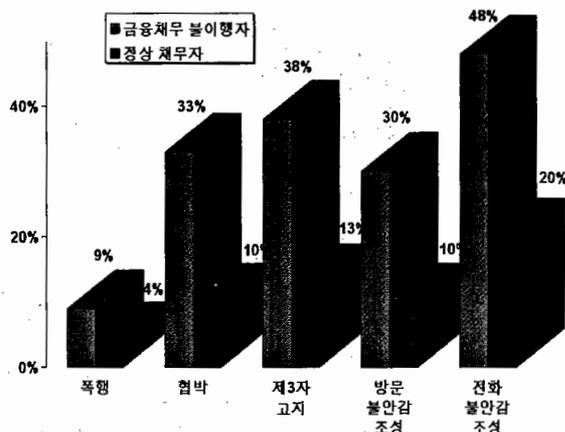


□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정상채무자에 비해 불법추심 피해가 2~3배이상 많음

○ 정상채무자도 일정부분 불법추심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

【금융채무불이행자 여부별】

구 분	금융채무불이행자	정상채무자
폭행	9%	4%
협박	33%	10%
제3자에게 채무사실 알림	38%	13%
방문을 통한 불안·공포감 조성	30%	10%
전화등을 통한 불안·공포감 조성	48%	20%



11 대부계약 체결시 경험한 부당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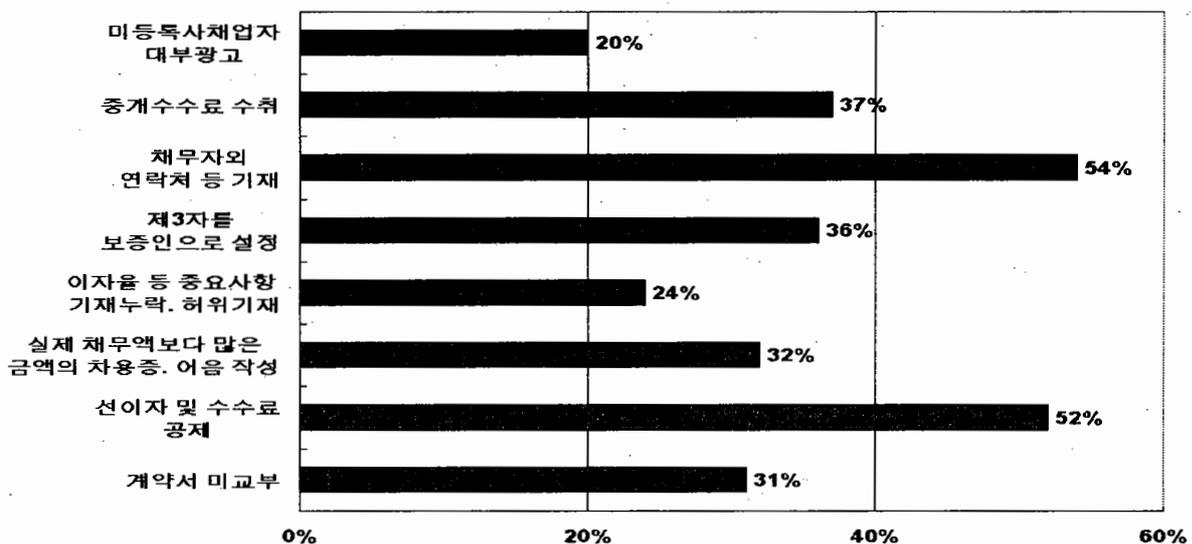
- 대부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가족 등 타인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 기재를 요구받은 사람이 54%(‘04년 64%)
- 선이자 및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금전을 차용한 경우가 52%(‘04년 52%)이며 기타 계약서 미교부 등의 부당 사례를 경험

【대부계약 체결시 경험한 부당사례】

(단위 : 명)

구분	2004년	2005년
계약서 미교부	996(26%)	1,574(31%)
선이자 및 수수료 공제	2,262(59%)	2,678(52%)
실제 채무액보다 많은 금액의 차용증·어음 작성	1,353(35%)	1,666(32%)
이자율 등 중요사항 기재누락·허위기재	906(23%)	1,216(24%)
제3자를 보증인으로 설정	699(18%)	1,861(36%)
채무자의 연락처 등 기재	2,459(64%)	2,797(54%)
중개수수료 수취	-	1,902(37%)
미등록사채업자 대부광고	-	1,038(20%)
비율산출기준	3,859명	5,133명

< 대부계약 체결시 경험한 부당사례(‘05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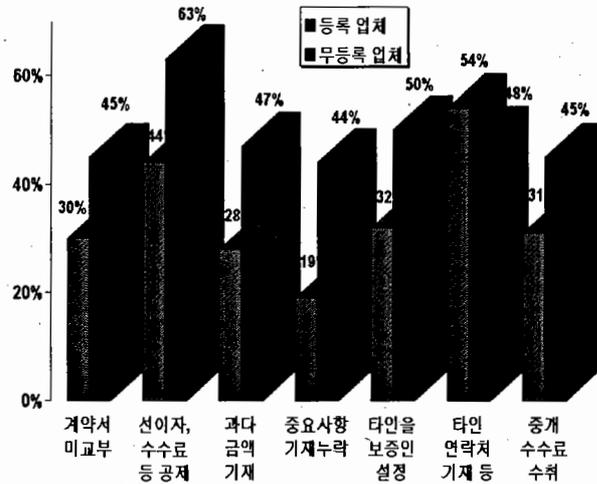


□ 무등록업체를 이용한 사람은 등록업체를 이용한 사람에 비해 계약체결과 관련 부당한 사례를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

○ 등록업체의 경우 향후 채권추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주변 관계인의 연락처 기재요구가 많은 것(54%)으로 나타남

【등록 여부별 부당사례 경험】

구분	등록업체	무등록업체
계약서 미교부	30%	45%
선이자,수수료 등 공제	44%	63%
과다금액 기재	28%	47%
중요사항 기재누락	19%	44%
타인을 보증인으로 설정	32%	50%
타인 연락처 기재 등	54%	48%
중개수수료 수취	31%	45%



시사점 5 : 불법채권추심 · 기타 부당사례

□ 무등록업체를 이용할 경우 불법채권추심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부당한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음

【필요사항】

➔ 불법업체 단속강화를 통해 무등록업체의 대부업 등록유도

□ 관계인의 연락처 기재요구 등 불법은 아니나 부당한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

【필요사항】

➔ 부당한 피해에 대해 감독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지도(단기방안) 및 명시적인 규제근거 마련(장기방안)

12 제도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

□ 연체기록(25%), 대출이 안 될 것 같아서(24%), 보증·담보 요구(21%), 긴 대출심사기간(11%)이 제도금융을 이용하지 않은 주요 이유로 나타남

○ 제도금융의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금융을 이용*하는 사람도 35%

* 대출이 안될 것 같아서(24%), 긴 대출심사기간(11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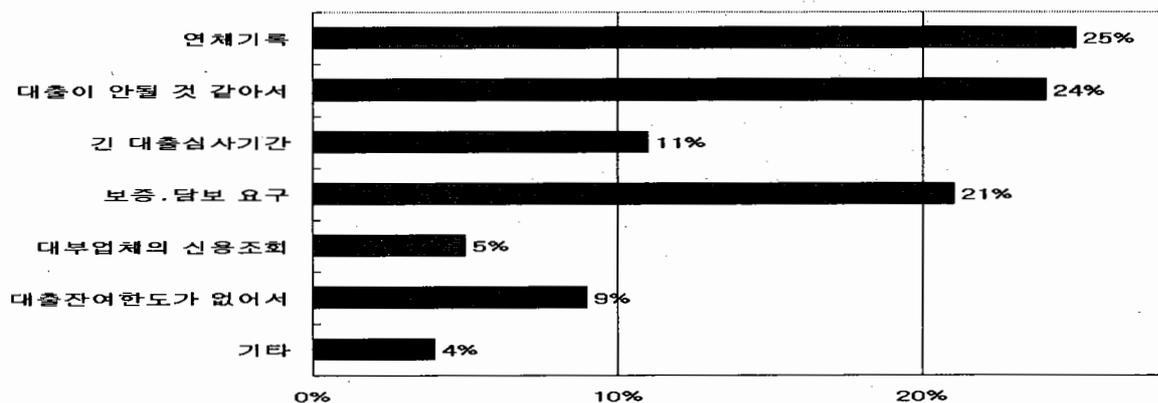
○ 대부업체의 신용조회기록 때문에 제도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5%

【제도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】

(단위 : 명)

구분	2003년	2004년	2005년
연체 기록	319(20%)	795(21%)	1,280(25%)
대출이 안될 것 같아서	339(21%)	866(22%)	1,252(24%)
긴 대출심사 기간	231(14%)	296(8%)	541(11%)
보증·담보 요구	457(28%)	995(26%)	1,079(21%)
대부업체의 신용조회기록	-	132(3%)	275(5%)
대출잔여한도가 없어서	166(10%)	487(13%)	479(9%)
기타	18(1%)	57(1%)	186(4%)
무응답	85(5%)	231(6%)	41(1%)
	1,615명(100%)	3,859명(100%)	5,133명(100%)

< 제도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('05) >



13 사금융을 알게 된 경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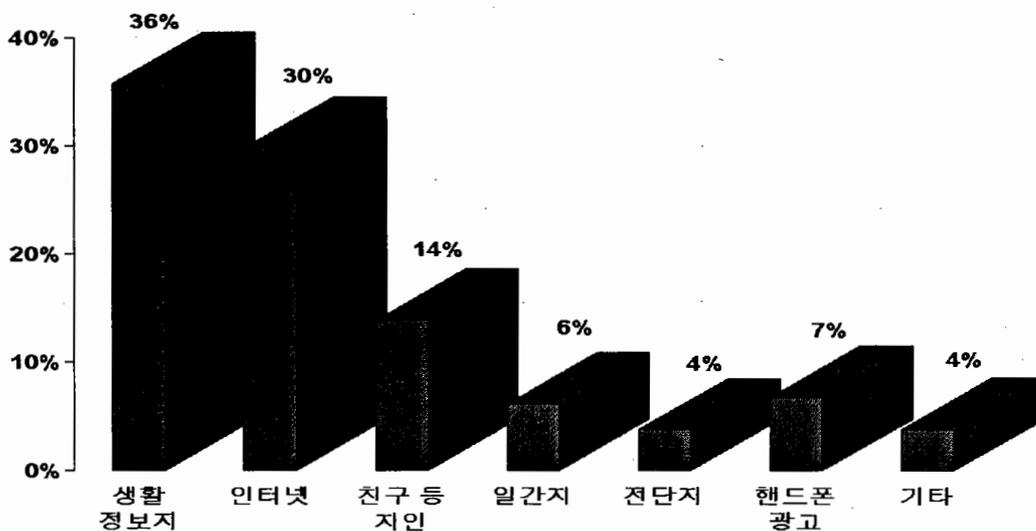
- 대부업체를 알게 된 경로와 관련 생활정보지가 36%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인터넷 30%, 친구 등 지인 14%를 차지
- '04년에 비해 생활정보지는 9%p 감소하고, 인터넷은 11%p 증가
- 전체설문응답의 81%가 인터넷 응답인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

【사금융을 알게 된 경로】

(단위 : 명)

구분	2003년	2004년	2005년
생활정보지	653(40%)	1,735(45%)	1,836(36%)
인 터 넷	343(21%)	748(19%)	1,527(30%)
친구 등 지인	248(15%)	706(18%)	711(14%)
일 간 지	164(10%)	180(5%)	313(6%)
전 단 지	163(10%)	275(7%)	192(4%)
핸드폰 광고	-	39(1%)	345(7%)
기 타	-	127(3%)	193(4%)
무 응 답	44(3%)	49(1%)	16(0%)
	1,615명(100%)	3,859명(100%)	5,133명(100%)

< 사금융을 알게 된 경로('05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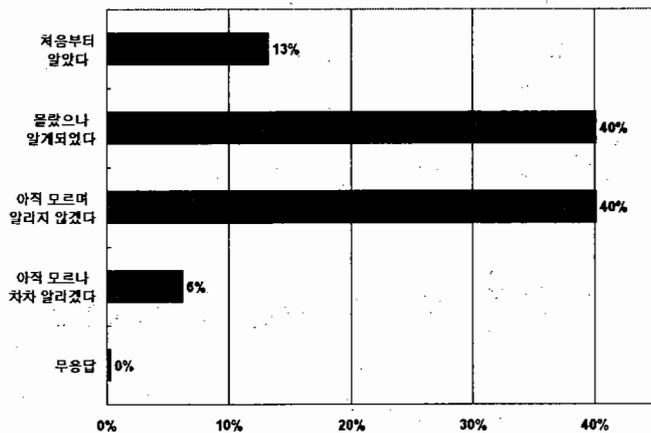


14 사금융 이용사실의 가족 인지여부

- 현재 사금융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의 86%가 가족 몰래 사금융을 이용
 - 현재까지 사금융채무에 관하여 가족이 알지 못하는 1,419명 중 87%(1,228명)는 앞으로도 가족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응답

【가족 인지여부】

구분	응답자수
처음부터 알았다	405명(13%)
몰랐으나 알게 되었다	1,228명(40%)
아직 모르며 알리지 않겠다	1,228명(40%)
아직 모르나 차차 알리겠다	191명(6%)
무응답	9명(0%)
비율산출기준	3,061명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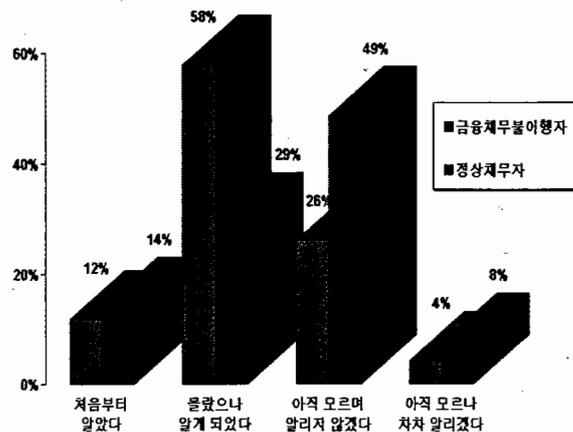


* 현재 사금융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자

- 정상채무자의 49%는 가족이 사금융이용 사실을 알지 못하며 앞으로도 알리지 않겠다고 응답
 - 사금융을 이용사실을 가족이 처음부터 알았다는 응답비중은 정상채무자(12%)와 금융채무불이행자(14%) 모두 미미

【금융채무불이행자별】

구분	금융채무불이행자	정상채무자
처음부터 알았다	12%	14%
몰랐으나 알게 되었다	58%	29%
아직 모르며 알리지 않겠다	26%	49%
아직 모르나 차차 알리겠다	4%	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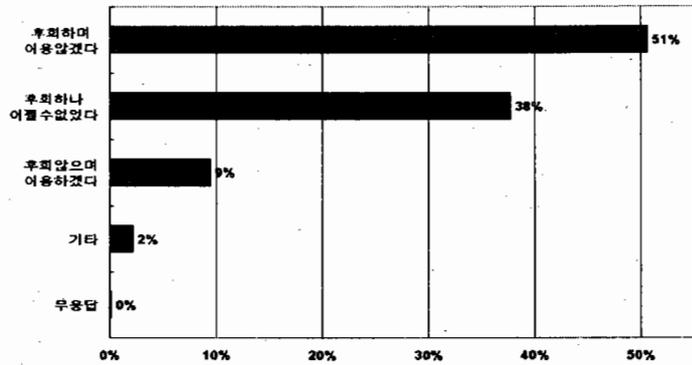


15 사금융 이용후 현재의 심정

- 사금융을 이용한 후 현재 후회하고 있다는 응답이 88%이고, 후회는 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었다는 응답도 38%

【현재의 심정】

구분	응답자수
후회하며 이용않겠다	1,548명(51%)
후회하나 어쩔수없다	1,154명(38%)
후회않으며 이용하겠다	289명(9%)
기타	66명(2%)
무응답	4명(0%)
비율산출기준	3,061명*



* 현재 사금융채무가 있다고 응답한 자

시사점 6 : 사금융 이용관련

- 사금융이용자의 상당수가 제도금융기관의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사금융을 이용

【필요사항】 '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' 이용 유도 및 금융회사 대출절차의 신속·간이화

- 주로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을 통해 사금융을 접함

【필요사항】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대출광고의 정화 필요

- 사금융이용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, 사금융업체는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위협

【필요사항】 경제적 어려움을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 조성

- 사금융이용이 불가피한 상대적 저신용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필요